



△ 회사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살리기 투쟁으로 맞서자

미국발 공황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기회로 삼자!

미국발 경제위기로 유럽, 일본, 중국, 아시아, 중남미 할 것 없이 경제위기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자다가도 일어나 CNN뉴스를 시청하는국민이 늘어날 지경이니 말 다했다. 하루아침에 51조가 날아간 쇼크를 겪기도 했다.

살아남기 위한 한국자본가들의 발악

미국발 경제위기는 한국 자본가들을 여러 형태로 어려움에 처하게 할 것이다. 우선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글로벌 증시 수익률 악화에 견뎌내야 하며, 선진국 침체에 따른 수출경기 급락을 이겨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국내의 건설경기 침체, 내수 침체와 생산자 물가상승도 이겨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한국자본가들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의 매경설문조사에서 한국 자본가들의 최대 걱정거리는 글로벌 경기침체(41%), 금융시장불안(22%), 환율(22%), 고유가(10%), 북한 요인(5%)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원가절감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고경영자들에게 원가절감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전담을 의미할 뿐이다. 원가절감을 위해 생

산성 향상, 임금동결, 외주화 확대, 비정규직 확산 등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 떠넘기기 공세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공격과 함께 이데올로기 공세도 강화한다. 세계경제가 어려우니 노사가 협력해 회사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릴 것이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 노사가 윈-윈하는 게임을 할 수 있다고 감언이설로 꼬일 것이다. 이미 상반기에늘어난 노사화합선언의 높은 수치는 회사살리기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얼마나 먹혔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파업건수(79건이 있음)가 가장 적었던 해가 97년이다. 이는 다가오는 IMF 경제위기를 회사살리기를 통해 극복하고 고용을 보장받고자 했던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은 회사살리기에 적극 동참한 노동자들을 이용해 먹고선 헌신짝 버리듯 정리하고 해 버렸다. 98년 정리하고 반대투쟁이 불길처럼 타올랐던 것은 정리해고와 더불어 회사의 배신에 치를 떨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역사가 다시 재현되어선 안 된다.

‘회사살리기’가 아닌 노동자 살리기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은 회사살리기가 아닌 노동자 살리기여야 한다. 개별 자본이, 아니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마저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런 자본주의를 폐절시키고 해야 한다. 자본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적은 임금인상률을 요구한다면 쌍심지를 켜고 싸워야 한다. 외주화, 비정규직화를 추진한다면 우리의 고용을 지키는 투쟁에 불을 지펴야 한다. 나아가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가 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노동자살리기는 대중행동강령에 기반할 때 승리의 전망을 내올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단호할 것이다. 자본의 이윤창출 영역의 확대를 위해 공기업의 사유화를 추진한다. 자본의 이윤회복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인하도 실시한다. 산업자본의 투기화를 위해 금산 분리 완화도 이뤄진다. 비정규직 악법을 더 개악할 예정이다. 촛불행동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경찰의 면책특권과 집단소송법 도입도 계획 중이다. 1%의 부자를 위해 국회, 행정, 사법을 총동원

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대해 탄압과 회유로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노동자들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2088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서울지하철에서 투쟁의 불길이 오르기 시작했다. 8사공투본(철도, 발전, 가스,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한국공항 등)이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할 때이다.

하반기 노동자투쟁은 크게 세 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첫째, 공기업 사유화 저지투쟁이다. 촛불에 데여 잠복해 들어갔던 물, 가스, 의료, 전기 사유화를 저지하는 투쟁이다. 8사공투본은대정부 투쟁의 승리를 위해 투쟁의 시기를 집중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철폐투쟁이다.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을 축으로 한 전 사회적인 연대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비정규직철폐단인선언 만인행동을 강화하고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철폐 투쟁의 의지를 현장으로 전파해야 한다.

셋째,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악법 철폐투쟁이다.

위기를 겨우 넘긴 이명박이 경제위기로 빨려들어 가고 있는 총자본의 이익을 위해 분신쇄골의 각오로 추진하는 정책을 깨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벼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투쟁을 승리로 쟁취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기회를 살기하지 말자. (관련 기사 2면)

정원현



미국 금융위기 |

자본주의 공황의 고통, 누가 대가를 치러야 하나? 노동자인가, 자본가인가?

미국경제가 위기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5위의 투자은행 베어스텝스에 이어 4위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으며 3위의 메릴린치가뱅크오브아메리카(BOA)로 매각되었다. 베어스텝스 파산 때만 해도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정부와 학계도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는 비관적 진단에 동의하고 있다.

줄파산과 연이은 구제금융

부시 정부는 모기지 국책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긴급구제금융을 투입한 후 더 이상의 구제금융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지켜봤다. 그러나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AIG에 대한 850억 달러 구제금융 투입에 이어 7,000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 투여를 시사함으로써 더 이상 악습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며 구제금융을 거부한 부시가 단 며칠도 안 돼 구제금융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정도로 위기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시 정부의 긴급한 대응은 “미국 금융시장은 언제 누가 쓰러질지 모르는 러시안 룰렛게임의 형국”이라는 폴 크루그먼 교수의 진단에 대한 해결책처럼 보인다. 언제, 어디서, 어떤 금융기관이 파산할 지 모르는 상황이 작금의 미국경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먼브러더스에 이어 세계 최대 보험사인 AIG, 미국 최대 저축 대부조합인 워싱턴뮤추얼과 영국 최대 모기지 업체인 HBOS, 스위스계 대형 투자은행 UBS 등 10여 개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명단에 올라있는 실정이다.

부시 정부의 마지막 선택

신용위기 관련 손실 전망이 기관과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최소 1조~2조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 IMF는 9천5백억 달러, 골드만삭스는 1조 2천억 달러,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조 5천억 달러, 루비니 교

수는 2조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기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금융사들이 털어낸 부실은 5,000억 달러 가량으로, 단순 수치로 비교하더라도 위기가 절반이나 1/3도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시작한 미국 경제위기가 알트-A, 프라임우량 모기지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택값은 지속적으로 폭락할 예정이다. 최소 지금보다 10% 이상 더 내릴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월스트리트의 자랑인 금융파생상품이 만들어낸 가공자본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기는 산업과 고용에 심각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금융위기 소비위축 성장둔화실업률 증가 소비위축의 악순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업률은 급등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구조조정과 실업은 단지 금융산업,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IT산업 등 전 산업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경제 붕괴를 손놓고 기다릴 수 없는 부시 정부는 7,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구제금융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시 정부가 전쟁을 제의하고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7,000억 달러의 개입으로 경제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까? 작금의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온 루비니 교수는 “지금 미국 정부는 대형 은행들의 실패를 모두 구제할 만한 돈이 없다”며 “지금의 금융시장의 혼란을 해결할 만한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1년 전 8,000억 달러에 달했던 연준(FRB: 미국 중앙은행) 기금이 조만간 1,95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어 미 재무부는 연준의 요청에 따라 18일 400억 달러어치의 국채 발행에 이어 추가로 600억 달러의 단기국채를 발행, 연준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윤은 私有化, 부실은 社會化하는 자본주의

부시 정부의 거창한 구제금융이 성공할지 실패할 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패한다면 전 세계적인 대공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성공한다면 할지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경기침체가 지속될 거라는 점이다. 부실을 정부가 떠안는다 해서 부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부실을 떠안은 미국 정부는 핵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던 쌍둥이 적자— 무역수지적자와 재정 적자—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경제전문가 사이에서 주요 내거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 재무

부 차관이 일본 금융회사 CEO들에게 연락해 채권을 구매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해야 하는 지경, 지금 미국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 붕괴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혁명 없이는 경제위기 때마다 손실을 사회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왔다. 자본주의는 위기 대처에 대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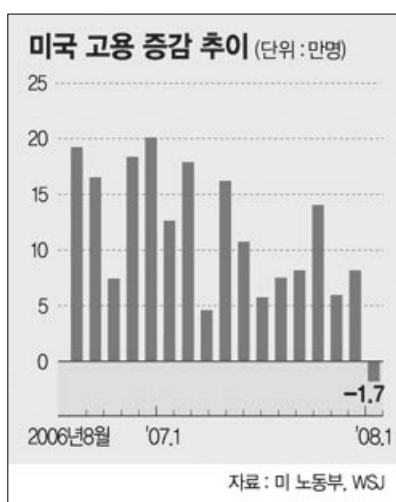
첫째는 이윤은 사유화하면서 부실은 사회화하는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속성이다.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경계하자는 작자들도 경제위기 앞에선 침묵한다. 이윤은 자본가들의 뛰어난 경영 덕분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할 몫이고 부실은 국민의 혈세로 매워 서라야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가 된다.

둘째 속성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 민중이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중국, 한국 등 국적과 상관없이 자본주의라면 모든 곳에서 그러하다. 정리해고와 실업률 상승, 비정규직의 확산,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강화는 기본이고 물가상승, 조세부담조차 노동자 민중에게로 돌아온다. 국민의 혈세(유리지갑인 노동자의 세금)로 만든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이중의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자본가계급에게 대항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부실의 사회화가 아닌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대처해야 한다. 인간 노동의 결실이 한층 자본가들의 이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화, 공유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되어야 한다.

■ 정원현

▽ 미국 노숙자들



“노동자계급은 부실의 사회화가 아닌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대처해야 한다. 인간 노동의 결실은 인민대중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화, 공유화되어야 한다.”

◀ 점점 더 많은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전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투쟁사업장들의 상황 변화

뉴코아 합의 이후 승리이전 패배이전 휴지기를 갖게 되긴, 투쟁사업장 문제가 '정리되어' 가는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 다행히 성신여대는 거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알리안츠는 성과급 문제는 해결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KTX·새마을호 투쟁은 결국 추석 전 타결이라는 꼭지점을 찍지 못하고 13일 밤에 고공농성과 식사농성 모두를 해제하게 되었다.

이런 투쟁도 공정위에서 휴에버에 대한 홈플러스의 기업결합 승인이 된 이상 홈플러스와의 교섭 진척이 예상되며, 불법파견 고용의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온 마당에 코스콤 역시 신입 사장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난 3월에 결성되어 5개월여 공동투쟁을 벌여왔던 '비정규·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공투단) 역시, 향후 투쟁사업장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공동투쟁을 위해 역사적 역할을 마감(해소)할 것을 결정하고 평가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전선 설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

이러한 상황에서 기륭공대위의 제안으로 '만인선언만인공동행동'이 시작되었고, 지난 9일 서울역 촛불문화제에 이어 오는 23일 2차 공동행동으로 집회와 문화제가 진행된다. 공투단이 사실상의 힘을 잃은 후 투쟁사업장의 공동행동이 주축했으나, 만인선언운동은 다시 한번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을 위한 공동행동의 깃발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하반기 투쟁전선 설치를 위한 다른 노력들도 존재한다.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개최를 결정하고 9~10월 다양한 기획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철폐연대) 또한 비정규직 권리선언운동을 제안한 상태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새로운 문제의식들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걸고 단위사업장을 뛰어넘는 사회정치적 투쟁을 만들어가자"는 것과, "조직된 투쟁사업장만이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에게까지 저항의 주체를 확장하자"는 것이다. 분명 이러한 것들은 기존 투쟁전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촛불투쟁의 경험 속에서 나온, 진일보된 문제의식임에 틀림없다.

진전된 문제의식에 따라 나온 제안들이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약점도 갖고 있다. 기륭공대위와 철폐연대의 제안은 모두 '선언운동'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선언'이란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동의 발전을 매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전비연의 제안도 '비정규노동자 5



▽ 지난 9월 9일 서울역 비정규 1차 공동행동사진 : 참세상

대 요구'를 선포하고 구체화하는 기획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비정규직법·파견법 철폐,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원청사용자책임과 특수고용 노동3권,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선언'하는 수준이라면, 이미 몇 해 전부터 운동의 과제로 제기되어 꾸준히 이뤄져왔던 것이다.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비정규투쟁의 '확산' 문제를 중심으로 두고 다뤄야 할 시점이 아닐까?

아울러 기륭공대위의 제안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도 이뤄졌는데, '아래로부터' 공동행동을 묶어가려는 주체적 관점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아래로부터'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원칙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현 시점에서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상층의 관료주의화는 시스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들이 대의원대회·중집회의에서 하는 결의조치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며, 하다못해 이들이 내리는 공문조치 현장에서 무시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라는 긴박한 정세를 내용으로 녹여내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권리선언/만인선언의 내용은 이미 수년 전부터 비정규운동 단위에서는 충분히 공유하고 있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 경제위기와 대공황에 직면하여 "위기의 대가를 어떤 계급이 지불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노동과 자본의 대결전을 앞두고 있는 긴박한 정세이다.

이런 정세적 요인들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알기 쉽게 대중화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접근해야 한다. 그저 '사회양극화' '비정규직법' 문제만 갖고 접근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부

르주아 신문들조차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비명을 질러대는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위기를 핑계로 비정규직법조차 무시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을 짓밟으려할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를 매개로 내용을 채워가려는 것은 "저항의 주체를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로 확장하자"는 문제의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자세이다. 현재 대대적인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라면, 이상하리만치 조직노동자들보다 미조직노동자들이 훨씬 더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폭등 못 살겠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터져 나오고 있고, '월급고개'라는 말이 인터넷에서 회자된다.

저항의 주체를 미조직 노동자들로 확장하기 위해

앞서 말한 것처럼 추석을 전후하여 기존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상황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정리되는 사업장들이 늘고 있고 투쟁동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하반기 투쟁전선 설치를 위한 여러 제안에 대해 참여하는 밀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투쟁사업장들을 중심에 놓고 하반기 투쟁을 만드는 것은, 자칫 '주체 없는 전선'이 되어버릴 공산이 크다.

저항의 주체를 미조직 노동자들로 확장하는 운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모와 양이 필요한데, 투쟁사업장들이 그 짐까지 짊어질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투쟁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을 운동의 주체로 끌어올리는 길이다. 지금까지 투쟁사업장들이 외롭게 짊어져왔던 투쟁전선 유지의 책임을 나누자는 것이다.

그 수단은 다시 한번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공동행동을 다양한 기획과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길 뿐이다.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들의 투쟁

처럼 새롭게 투쟁사업장으로 올라오는 사업장에 연대를 조직하는 것도 그런 수단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투쟁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들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나서는 것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미조직 노동자들은 몰라서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과 투쟁이라는 저항수단을 몰라서가 아니라, 저항에 나설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투쟁사업장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불쌍하다. 돕고 싶다"는 수준이며 "내가 나서야겠다"는 의식으로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위기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강한 추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투쟁사업장이 아닌 다수 비정규사업장 평조합원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보기에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운동의 주체로 끌어올리는 것은 하반기 투쟁과 내년 투쟁을 위해 돌파해야 할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다윗이 기발한 방식을 개발하여 골리앗을 꺾은 것이 아니다. 다윗은 용기를 내어 투쟁을 선택함으로써 비로소 다른 다윗들과 연대할 수 있었고, 그 힘으로 마침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 평범한 진리를 미조직 노동자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들의 대대적인 진출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 될 것이다.

"운명은, 하고자 하는 이는 인도하지만, 하지못해 하는 이는 끌고 간다" — 자, 운동을 밀어 올리는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운명에 끌려갈 것인가! 선택은 명확하지 않은가!

■ 오민규

기보 |

사노련 탄압에 항의하는 노동자 동지들의 목소리

[편집자] 지난 13호에 이어 다시 여러 동지들이 사노련 탄압에 대한 규탄 발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탄압에 굴하지 말고 당당히 투쟁하라는 동지 여러분들의 성원에 저희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힘찬 투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노동자 정치권동의 자유를 쟁취하고 노동해방 쟁취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사노련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 정부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라졌어야만 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탄압은 이명박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누르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공안탄압을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암흑 같은 군사 독재 시절의 엄혹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결국 거대한 규모로 분출하여 독재정부를 몰러나도록 만들었다. 현재 노동자들의 처지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지금은 힘겹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억누를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분출할 것이다. 정부의 탄압은 그것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철도노조 조합원 김성노)

힘없는 서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그들과 같이 한 것이 사회기반을 흔드는 일인지?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가진 자만의 세상을 만드는 현 정부가 사회기반을 흔드는 것인지?

사노련 동지들이 힘없는 대중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권과, 보수언론, 자본의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동지들의 승리가 있기를 확신합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박현제)

사회주의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미래이고,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자본주의에 맞선 유일한 선택입니다.

이번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그동안 사회주의노동자연합동지들의 헌신적인 현장투쟁이 자본과 정권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본의 총견임을 증명하려 안달이 난 대통령을 포함한 관료들이 한심하다 못해 측은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 민중들에게 더욱 다가서는 혁명적 사회주의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고자 윤선문)

정치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명박

정권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그 한길에 서울지역일반노조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서울지역일반노조 위원장 윤선호)

우리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상의 자유는 당연히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어 보장 되는 것이기에 대한민국헌법은 당연히 사상의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 땅의 노동자, 민중 누구라도 어떠한 책자라도 읽을 자유가 있으며 어떠한 사상이라도 담지 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이를 표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그리스 신화가 있다. 악당 프로크루스테스가 여행자들을 납치하여 때로는 다리를 자르고 때로는 다리를 늘려서 자신의 침대에 맞추었다는 이야기로 서양의 근대철학이 사고의 기준을 자신의 주관으로 바꾸어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획일화시킨 것을 비유 할 때 쓰이는 이야기이다. 나는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비유에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과 소위 촛불국면의 민심이반과 권력의 힘을 축적하기위한 마녀사냥의 일환으로써 “사노련” 사건만큼 잘 들어맞는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한다. (전해투 변외성)

지금 이 어느 시대인데 박물관에 가야 할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감옥에 가둔단 말인가! 사노련에 대한 탄압은 물가폭등, 경제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전초전일 뿐이다. 지금 당장은 사노련에 대해 칼날을 들이밀었지만, 탄압의 대상은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로 확대될 것이다. 사노련에 대한 탄압을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힘으로 분쇄하자! (공공노조 서울경인지부 지부장 장성기)

착취와 억압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은 노동자계급의 당연한 역할이다. 이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다면,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함께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려는 모든 이

들이 반국가세력이란 말인가? 낡은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파탄 난 노동자 민중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효성 해복투 최만식)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은 전두환정부 시절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군화발로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와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실패를 노동자들,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대대적인 양산, 경제파탄, 촛불저항 등을 만들어낸 주범인 그들이 오히려 노동자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적으로 삼는 것이다. 더 큰 탄압은 더 큰 저항을 불러올 뿐이라는 점을 이명박 정부가 깨닫게 해주자! (철도노조 비정규직조합원 김도환)

촛불투쟁과 사노련을 억지로 엮으려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치졸함을 현장노동자들은 알고 있다.

노동자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대중적인 힘으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제 사회주의 정치운동은 대중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울의류제조업노조 위원장 김정호)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개정과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독재정권의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위한 낚치기여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것이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은 반인권적 법률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임이 명백하다. (울산 노동법률원 변호사 정기호)

자본가들을 살리겠다는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이미 경제파탄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자본주의를 구원할 것이라며 자본가들이 자신만만 펼쳐놓은 신자유주의 노선은 세계 도처에서 좌초되고 있다. 사노련 동지들을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의 사상과 주장은 이러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

다. 지금의 사노련 탄압에 맞선 투쟁은, 정치사상의 자유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대안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공세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가자!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김지환)

오로지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노동자, 서민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활동을 해오던 사노련 활동가들을 공안 정부는 역시 가만 두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폭력을 휘두르며 잡아두려 했지만 그들은 촛불의 힘을 거스르지 못했죠. 쥐새끼처럼 구질한 생명연장만이 목표인 기득권들은 노동자의 촛불은 잡초처럼 밟고 또 밟아도 기필코 살아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보여줍니다!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정인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법의 잣대로 제단하고 통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벌써 쓰레기통속에 버려져야 할 국가보안법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하는 짓거리마다 게그콘스트 뺨치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어처구니없게 만들고 있다.

사회주의를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 삼류 소설 정도도 되지 않는 저급한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이명박 정권 또한 그에 상응하는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전국사무연대노조 조직국장 박성상)

노동자는 단결해야 하고, 헌법에도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자 투쟁에 함께 했던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면, 현재비정규직투쟁에 연대를 요청하고, 지역의 투쟁사업장에 연대한 나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적들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 많이 연대하고, 단결하자! 이것이 공안탄압을 분쇄하는 것이다. (현재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박민호)



△ 9월 10일 울산에서 있는 사노련 석방자 보고대회(사진 : 울산노동뉴스)

정세 초점 ① |

국가보안법, 노동자의 사상·실천인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로 돌파하자!

촛불운동 탄압! 정치사상의 자유 정취!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울산공안 탄압분쇄 대책위원회(이하 공안탄압 분쇄 대책위)는 18일 현대자동차 구 정문 앞에서 출근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공안탄압대책위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7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시도에 맞서 즉각적인 반대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연행되자마자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현대자동차 지부 등은 즉각 규탄성명서를 내어 방어투쟁을 조직했고 이후 투쟁사업을 모색해왔다.

촛불운동이 사그라지자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안탄압이 빚발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속, 금속노조 위원장 현자지부 수석부지부장 구속,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었던 네티즌에 대한 탄압, 언론장악 시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을 가해오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 다수당임을 악용해 부자들 1%를 위한 마구잡이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작금의 탄압은 더 이상 정권과 국회에 맞서 투쟁하지 말 것을 폭력적으로 보여주

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패배한다면 피로 정취한 민주화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함이 대책위 구성의 밑바탕에 깔려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울산지역 해고자협의회/법률사무소 새날/노동자의 힘 울산모임/다함께 울산모임/민주노동당 울산시당/사회당 울산시당/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울산위원회/진보신당 울산당원모임/전국노동자회 울산위원회/울산노동자배움터/현대중공업 전노회/현대중공업 청년노동자회/서영호·양봉수 열사 정신계승 사업회 등 공안탄압대책위 구성에서 드러나듯 대중조직, 정치조직, 현장조직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서울공대위가 정치조직 중심이어서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에 좋은 조직구조다.

공안탄압대책위의 구성은 사업에서도 반영된다. 현장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하기 위한 사업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 공안탄압분쇄 울산대책위는 1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 출퇴근

선전전 및 중식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주요 거점지역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한다 ▶ 울산지역 주요거점에 현수막을 부착한다 ▶ 사노련 영장 청구시 즉각적으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청구 당일 저녁 검찰청 앞 촛불 문화제 또는 항의 집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낮은 차원의 서명운동이지만 대시민 선전전 및 서명만이 아니라 울산지역본부 중심으로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공장 앞 아침 출근투쟁에 이어 중식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현장에서 전개한다. 출투를 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사전에 찾아가 지회장들과 논의를 통해 유인물 배포와 함께 서명운동을 할 것을 결의하기도 한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노동자 사상, 노동자 실천의 무기를 부여잡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공대위, 공안탄압분쇄울산대책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진노동자들은 정치사상의 자유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사진: 울산노동뉴스

알고 있다. ‘촛불운동탄압 분쇄! 정치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대중조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야만 가능하다. 그 시작을 열고 있는 공안탄압분쇄 울산대책위의 선포를 따라 타 지역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투쟁사업을 배치했으면 한다.

정치사상의 자유 정취!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공안탄압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의 한축임이 분명하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자의 사상·실천 강령인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로 돌파해야 한다.

■ 정원현 (울산지역위원장)

정세 초점 ② |

북한 김정일 체제의 위기, 부시와 이명박의 야합에 맞서야 한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김정일 와병설은 공인된 사실이다. 권력이 집중된 관료집단의 정점에 막대한 권력을 쥐고 김정일 1인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피라미드식 북한 체제를 고려할 때, 김정일 와병은 북한 체제 전반의 급격한 동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제기반의 전면적인 붕괴에 따른 대중들의 절망감과 분노가 가세한다. 김정일의 건강이 결정적으로 악화된다면, 북한 체제의 급격한 동요, 심지어는 기존 체제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

북한 김정일의 사망, 그리고 북한의 관료적 지배체제의 붕괴에 대해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무너져도 빨리 무너져야 할 반동 체제다. 문

제는 그 다음이다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또 다른 반동 체제의 등장, 아니면 노동자 민중에 의한 진정한 변화의 시작?”

부시와 이명박의 계획

김정일 와병설을 접하자 미국 부시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사회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정부 관련 부처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이 무엇인지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보수 언론들이 알려준다.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군사적 행동조치”다.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잠시 물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지금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9”다. 이 계획의 요체는 ‘북한 내부 정변이나 폭동 등의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의 지휘 아래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것’이다. 진주의 결과는 간단하다. ‘한미연합군이 북한에서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작전계획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북한에서 약간의 이상만 발생해도,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미국 지배

자들의 판단에 따라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 지배자들의 위기를 뚫고 북한 노동자 민중이 새로운 정부 수립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때, 이것을 ‘폭동’으로 간주해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할 가능성이다. 이는 북한 노동자 민중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민주적 자유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짓밟는 것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합동작전을 통해 “군정체제”를 수립, 어떠한 민주주의도,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어떠한 투쟁도, 어떠한 노동자 민중의 정부도 북한에서 등장하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자계급의 연대 정책

반드시 거론해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은 미제국주의와 소련제국주의의 대리전을 강요받으면서 일어난 6.25전쟁이 재발할 위험성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지휘 아래 북한에서 군정을 실시하는 한국군에 대해 북한 노동자 민중이 보낼 반응은 정해졌다. “그들은 점령군이다!” 이것은 북한과 남한의 노동자들이 또다시 반동적 전쟁의 총알받이로 전락하고 서로 총부리를 겨

눌 거대한 위협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노동자 민중은 ‘미제 축출’을 내건 북한 관료집단의 영향력에 다시 포섭될지도 모른다. 남한에서도 계엄령을 비롯한 살벌한 반동 조치들이 활개 치면서 노동자 민중의 수십 년의 투쟁 성과들을 무로 돌리려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남북 노동자계급 모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 체제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파국이 예견되면 될수록 남한 노동자들의 적극적 정치행동이 절실하다. 반동 관료집단의 살인적인 탄압 앞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당장 일어나기 힘든 조건에서는 더욱 그렇다.

“작전계획 5029”든 무엇이든, 미국 지배자들의 북한 점령 기도 및 이명박 정부의 협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북한의 문제는 북한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뜻과 의지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단호히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해 전력을 다해 지원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것이 남북 노동자계급 모두가 사는 길이다.

■ 최영익

기획연재 | 총론

자본가들은 왜 사회주의를 두려워할까?

[편집자] 이번 14호부터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기획연재를 심습니다. 사노련 사건으로 사회주의가 공론화되면서 “사회주의가 정확히 뭐냐?”, “사노련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다른 데서 말하는 사회주의와 어떻게 다르냐?” 하는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10회에 걸친 사회주의 연재를 통해 이런 질문과 궁금증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많은 노동자 동지들이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회주의에 대한 총론적 차원의 글을 먼저 내보냅니다. 다음 호부터 제1회, 시작합니다.

- ❶ 취업계약에 담긴 비밀 - 착취는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가?
- ❷ 왜 많은 노동자들이 잔업, 특근을 바라는가? - 강화되는 착취의 율가미, 실업 문제
- ❸ 왜 노동자는 월요일을 싫어하는가? - 노동의 소외
- ❹ 월가의 파산, 예고되는 대공황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 - 시장경제냐 계획경제냐
- ❺ 노동자가 공장, 사무실, 철도를 소유 운영한다면? - 착취의 폐지
- ❻ 왜 경찰은 악질 사장은 보호하고, 노동자 파업에는 투입되는가? - 자본가국가의 실체
- ❼ 노동자가 국기를 스스로 운영할 수는 없는가? - 노동자 권력
- ❽ 인간본성은 이기적인가? 사회주의는 사람들을 다 똑같이 만드는 전체주의인가?
- ❾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그 뒤 어떻게 관료집단이 등장했는가?
- ❿ 사회주의자 당과 노동자 투쟁

‘사회주의’란 말은 탄생 시부터 증오와 모략,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회장들, 사장들, 권력자들, 고위 장교들의 특권과 이익, 거짓말을 정면으로 공격했기 때문이다. 반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지만 보잘 것 없는 것만을 얻는 사람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 즉가난한 노동자 민중들에게 ‘사회주의’는 가슴 벅찬 희망이었다.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노동자 민중의 행렬이 얼마나 거대했던가는 두 사례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모던 타임즈〉

위대한 영화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는 대공황과 세계대전으로 점철되었던 1920~30년대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1936년에 제작된 〈모던 타임즈〉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 노동자는 지나가던 차에서 떨어진 빨간 깃발을 주워들고,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소리치고 흔들며 달려간다. 그런데 불과 몇 십 분이 지나지

않아 이 빨간 깃발 뒤로 수천 명의 실업자,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 거대한 군중은 왜 빨간 깃발 뒤에 몰려들었는가? 대공황과 전쟁 속에서 삶과 목숨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려 간절히 탈출구를 찾던 가난한 사람들은 빨간 깃발이 상징하는 ‘사회주의’를 지지했던 것이다. ‘사회주의’를 향한 노동자들의 거대한 결집, 그리고 ‘사회주의’말고는 대공황과 전쟁, 실업 등으로부터 탈출할 길은 없다는 점을 모던 타임즈를 통해 찰리 채플린은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이 영화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열화와도 같은 지지를 받았다. 단지 영화만이 아니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노동자 정당 주위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80% 이상이 결집했다.

원산노동자 총파업

한국과는 무관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사회주의 운동의 전통은 한국 노동자계급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다. 일제하 가장 큰 노동자 파업투쟁으로 기록되는 원산노동자 총파업을 보자.

1929년 1월 29일, 대량해고, 강패들의 대대적인 동원 등 자본가들의 공세에 맞서 원산노련은 총파업을 선포했다. 원산노련은 식량과 기금을 아끼기 위해 하루 두 끼만의 식사를 하고, 술과 담배를 끊었다. ‘한 잔의 술, 한 개비의 담배, 한 톨의 낭비도 반동’이라는 단호한 구호가 내걸렸다. 원산과 일본을 오가는 화물선의 일본노동자들은 일본경찰이 코앞에서 쳐다보고 있는데도 대담하게 ‘원산노동자 총파업 만세!’를 외쳤다. 자본가들이 파업 파괴자를 모집하기 위해 원산 시내에 3,000장의 광고지를 뿌렸지만, 모집에 응하는 한국인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무려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 경찰, 군대, 강패들에 맞서 원산노동자 전체가 전개한 총파업은 식량이 바닥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감옥에 갇히면서 결국 막을 내렸다.

일제하 가장 강력했고 대규모였던 원산노동자 총파업은 누가 주도했던

들은 ‘사회주의’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탄압하는 것일까? ‘사노련 사건’은 자본과 정부, 자본가 언론은 결코 ‘사회주의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고, 그냥 놔두면 거대한 힘을 회복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그들의 판단이 옳다고 믿는다. ‘사회주의’의 어떠한 힘이 그러한 공포를 만들어내는지를 노동자 민중에게 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사회주의’를 알리는 기획 연재 기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다.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의 비밀

‘사회주의’가 수십 년간 영향력을 회복해오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사회주의’하면 사람들은 소련과 북한의 관료체제를 떠올린다. 하지만 소련,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를 파괴하고 등장했거나 사창하면서 등장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또 하나의 억압과 착취체제에 불과하다. 그러나 엄청난 영



▷ 자본가들은 ‘스탈린, 김일성 독재체제’와 사회주의를 동치시킴으로써 교활하게 음해해왔다.

가? 물론 원산노동자 전체가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이 총파업의 중심부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이 모든 노력은 실패했다. 경찰 취조실에서도 그 많은 조합원들 중 누구도 이른바 “빨갱이”가 누군가를 볼지 않았다. 이처럼 ‘사회주의’와 노동자민중은 이곳 한국에서도 하나로 만나고 있었다. 그랬기에 해방 직후에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를 비롯한 노동자 조직들에서 주도권은 확실히 사회주의 운동에 있었다. 미군정의 잔인한 살인통치, 일제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한 국가보안법과 같은 아만적인 억압이 없었다면, 사회주의 운동의 힘은 더욱 거대했을 것이다.

70년 후

모던 타임즈와 원산노동자 총파업으로부터 대략 70~80년이 흘렀다. 지금 ‘사회주의’는 어디쯤 있는 것일까? 모던 타임즈에 등장한 빨간 깃발 뒤로 노동자 민중이 구름처럼 모여들던 상황은 더 이상 없다. 원산노동자 총파업처럼 다수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을 전면 지지하고 온힘을 다해 보호하던 그런 상황도 더 이상 없다. ‘사회주의’에 작별을 고해야 하는가?

자본가들과 보수언론들, 정부는 그렇게 말한다. “끝났다!” 그런데 왜 이

향력을 가진 자본가언론들은 ‘사회주의 체제 = 소련, 북한의 관료지배 체제’란 등식을 강요한다. 또한 한국에서 사회주의는 미군정과 6.25전쟁,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폭력과 억압’으로 강제 매장되었다. 사노련에 대한 탄압에서 증명되듯이, 진정한 사회주의를 널리 알리는 것은 지금도 억압당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매일처럼 만드려고 확대해오고 있는 착취, 억압, 파국, 전쟁, 환경파괴 등이 노동자 민중에게 “자본주의는 이 따위 재앙들을 불러오고 있다. 이 아만적 체제의 수레바퀴 밑에 깔려 신음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안으로 전진할 것이냐?”를 계속 질문한다. 이 질문이 생기는 한,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한, 자본주의에 맞서는 거의 유일한 혁명적 대안으로 150년 이상 생명력을 이어온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영원불멸을 꿈꾸는 자본가계급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사노련 또한 바로 이 질문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지금부터 사노련은 이 질문에 하나씩 대답하면서 ‘노동자계급의 해방 사상인 진정한 사회주의의 전통’에 대해 노동자들과 대화하고자 한다.

■ 최영익



△ 깃발을 들고 시위대열 선두에 서게 된 채플린 사회주의를 향한 대중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

사회주의 당 건설, 공론화와 대중적 검증을 거쳐 대중적 결집을 이루어내자

이번 사노련 사건은 사회주의자들 앞에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라는 시험문제를 던져 놓았다.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이 맞닥뜨린 도전에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사회주의자들이 새삼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은 사노련 사건 이전에 사회주의 운동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들이 공공연한 사회주의운동을 펼쳐내지 못해서이다.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와 노동자운동을 온전히 결합시켜내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는 외적인 탄압 때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주체의 한계 때문이다. 한편으로 편협한 씨클주의와 수공업성이, 다른 한편으로 대중조직과 노동조합운동 뒤에 수줍게 자신을 숨기는 조합주의가 그 한계이다. 씨클주의와 조합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다. 사회주의 강령·전술·조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대중운동과 만나지 못한 데서 오는 편향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한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노동자당 출현의 불가피성

사노련 사건을 계기로 사회주의가 공론화되고, 사회주의운동이 대중적 담론의 한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사회주의자들의 발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청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현재 사회주의 세력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 대중화에 대한 논의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런 환경에 힘입어서일 것이다.

그러나 사노련 사건은 단지 우연적인 계기일 뿐,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든 대중화든 그것이 일회성의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 운동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다른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세력들이 위에서 말한 한계를 털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도약할 때에만, 사회주의 당으로 스스로를 조직화할 수 있을 때에만 전면화든 대중화든 그것이 구호를 넘어서 진정 물질화될 수 있는데, 이것이 그 같은 우연적인 계기가 되고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우연히 만들어진 일시적 환경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노련 사건 이전부터 사회주의 정치조직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 정당, 노동자계급정당, 사회주의 노동자당 등등의 이름으로 새로운 정당 건설이 시도되어 왔다.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운동으로 표현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좌초한 가운데 새로운 노동자 정당의 출현이 불가피하며 대세로 여겨지고 있는 운동 지형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사회주의 당 건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운동 지형위에서이다. 선언과 구호로 그칠 수 없고 그쳐서도 안 되는 이유이다.

실제로 노동자계급에 기반한 제3의 노동자 정당 출현이 불가피하며 직접적인

일정에 올라 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는 다른 새로운 노동자당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좋은 싫든 모두가 대세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노동자당을 만드는 것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약전전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이미 자본주의 체제내적 정당을 지향하고 타 계급, 계층을 두루 포괄하고자 반자본주의 변혁성과 노동자계급성을 스스로 털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실이 노동자계급 선진부위 누구의 눈에도 명백해졌기 때문에 진짜배기 노동자당 건설이 불가피해진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선진활동가들 사이에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위상이 실추될 대로 실추되어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 시도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의지를 넘어 전술로까지 끌어올려져야

그러나 새로운 노동자당 출현이 불가피하고 대세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노동대중과 현장활동가들 사이에 새로운 당에 대한 열망이 아래로부터 올라오고 있어서인 것은 분명 아니다. 단지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더 이상 ‘아니’라는, 그래서 또 하나의 노동자 정당 출현을 노동자계급운동의 분열로 대하지 않고 있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런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선진노동자들과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이 새로운 노동자 당 건설을 자기 과제로 받아 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사회주의 당 건설이 현실 노동운동의 질곡을 타파하고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맞서 계급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망과 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상층 정치무대에서 경쟁하는 또 하나의 노동자 정당이 출현한다는 정도도밖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 대중화는 단지 정치조직들의 구호에 그쳐버릴 것이다.

현재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사회주의 당 건설〉이 노동자운동에서 하나의 대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당위와 대의를 넘어 현재의 운동 지형을 재편하고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의 전술’로까지 끌어올려지지 않는다면, 선진노동자들과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이 주체로 나서는 사회주의운동과 당 건설은 여전히 사회주의세력들의 주관적 의지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없다. 필요충분조건으로 말하면, 필요조건은 갖췄지만 충분조건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적 검증·결집을 위한 방안과 프로그램 내와야

이런 상황에서, 예컨대 노동자의힘처럼 형식적으로 당 건설의 ‘경로와 일정’을 제시하고 “결집”을 말하는 것은 대의

를 선점하고자 노력하는 것일 수는 있겠으나, 진실로 선진노동자들과 대중들 속에서 사회주의운동을 전면화하고 현장노동자·활동가들을 당 건설의 주체로 세워내고자 하는 목적의식적인 계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지금 사회주의 정치조직들이 각자 당 건설을 선언, 추진하고 경로·일정까지 제시하며 서로 간에 제안도 오가고 있지만, 선진노동자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거의 공론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이 단순히 정치조직들 간의 통합으로가 아니라 현장노동자·활동가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당 건설의 주체로 나서는 과정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할 때 지금처럼 공론화조차도 시켜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당 건설을 정치조직들 간의 협정 같은 문제로 왜소화시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상황은 하루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 조직들의 입장과 제안들이 광범위하게 공론화가 되어 대중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 속에서 단일한 방향으로 대중적 결집을 이루어내야 한다.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에 나서고자 하는 정치조직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대중적 검증과 대중적 결집을 위해 발아나야 할 방안과 프로그램들을 놓고 집중 토론하자. 그리고 확정하여 실행에 들어가자.

역사적 과제 - 조합주의 극복

공론화와 대중적 검증이 한편으로 현장노동자·활동가들을 당 건설의 주체로 나서도록 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필시 한국 노동운동의 최대 질곡인 조합주의를 타파, 극복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면 공론화와 대중적 검증의 일차적 방안은 각 조직이 건설될 새로운 노동자당의 강령·전술·조직노선을 정식화해서 제출하고 이를 둘러싼 일련의 토론과 논쟁을 선진노동자들, 현장활동가들 사이에서 대대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진노동자들이 이러한 사회주의 강령·전술·조직노선을 자신의 행동지침으로 채택하고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나아가는 일대 전환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이 마침내 현장활동가들이 전투적 조합운동을 넘어설 수 있는 정치적·조직적 대안을 거머쥐고서 사회주의 활동가로 주체정립을 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이 단순히 조직들 간의 통합으로 전락되지 않고 노동자계급운동의 거대한 일보전진이 될 수 있다. 그럴 때만이 노동운동 내 개량주의와 관료주의, 의회주의 세력들의 장악력과 영향력을 무력화하고 계급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참된 대안과 전망이 될 수 있다.



정세적 과제 - 이명박 반대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새로운 노동자당의 건설은 조합주의 극복이라는 우리 운동의 역사적 과제와 함께 정세적 과제를 또한 돌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이 당면의 이명박 반대투쟁 전선을 이끌 수 있는지도 세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론화와 대중적 검증이 특히 참여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점이다.

현재 이명박 반대투쟁 전선은 잠재적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촛불시위가 단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하반기 이후에도 경제위기를 둘러싼 투쟁, 비정규직 투쟁, 공기업 민영화 저지투쟁 등이 모두 이명박 반대투쟁 전선을 다시 가열시킬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러한 투쟁들을 결합, 확대시키고 계급적으로 일반화·전면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사회주의자들에게 당면한 최대 임무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반대투쟁은 광범한 대중들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모아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사회주의 노동자당이라는 핵심 고리가 빠져 있지 않게 하는 것, 제 자리에 제 때 있게 하는 것이다. 당 건설 세력들은 이러한 계급적 정치투쟁 전선을 펼쳐낼 정치투쟁 부대를 제 때에 만들어내기 위해 이를 위한 전술과 조직화 방향을 지금부터 선진노동자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공론화시켜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반대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끌어올리는 공동의 사회주의 정치투쟁으로 대중적 검증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서 대중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투쟁의 용광로 속에서 진짜 노동자당이 단련되어 나올 것이다.

더 지체하지 말고 당 건설 시도와 제안을 공론화하자. 대중적 검증을 거쳐 대중적 결집을 이루어내자. 그러기 위해 먼저 공론화·검증 방안과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대중들 앞에 제시하자.

노동초점 |

주간연속2교대, 이제부터라도 노동자답게 제대로 싸우자!



△ '이 말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주간연속2교대 투쟁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현대기아 자본과 타협적 지부 집행부들의 아합안은 조합원들에 의해 모두 저지되었다. 하지만 소극적 반대와 부결에만 멈추면, 주간연속2교대 문제는 결국 표류하다가 좌초할 것이다. 강력한 대체지도력을 세워 운명을 걸고 자본과 대담하게 맞짱 뜨는 대중투쟁을 이끌 수 있는가는 사활적 문제로 던져지고 있다.

현대차 이어 기아차도 부결

현대 자본은 현대차에서 부결된 주간연속2교대 쓰레기 안을 기아차 노동자들에게 돌리려고 한다. 자본가언론은 “현대차 타결안에 대한 기아노동자들의 부결 이유 또한 해괴하다. 적자에 허덕인 기업이 흑자 기업과 같은 수준의 합의를 받아들이 수 없다는 억지다.”(헤럴드경제, 9월 17일자 사설)며 노동자들을 비방했다. 부결안을 ‘타결안’이라고 새빨간 거짓말하면서, ‘적자기업 노동자’는 쓰레기 안이라도 고맙게 받아먹으라고 지껄인 것이다.

정몽구 회장 재산은 08년 2조 7천 338억원으로 05년말에 비해 84.4% 상승, 부자1위가 되었다. 그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05년에 비해 무려 1,000% 상승한 1조 876억원으로 7위가 되었다. 그런데 자본가언론들은 ‘이른바 적자기업의 회장, 사장이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

만약 기아차 노동자들이 그 안을 받아들였다면, 자본은 그걸 이용해 현대차 노동자들에게도 폐기처분한 안을 다시 수용하라고 압박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의 분열음모는 기아차 노동자들의 현명한 부결 선택으로 1차 저지당했다. 이제 ‘단호한 공동투쟁’으로 전진해, 승리를 쟁취해야 할 때이다.

현대 자본의 검은 속셈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아

래 주간연속2교대를 착취 강화의 기회로만 여겨온 현대 자본의 전략은 뻔하다.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5일 가정통신문에서는 ‘무책임한 일부’가 ‘의견접근안이 심각한 기득권 저하를 초래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난하면서 ‘하루빨리 혼란에서 벗어나자’고 지껄였다. 추석 연휴가 끝난 18일에도 사장 담화문을 통해 ‘당장의 이익보다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고민’하라고 뇌까렸다.

결국 노동강도를 대폭 높이고, 심야노동을 유지하며, 십수년 투쟁으로 파낸 단합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아합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으니 노동자가 고통을 모두 떠안으라는 협박이다. 이런 협박은 세계 금융위기와 맞물려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돈에 미쳐 노동자를 물어뜯는 자본한테 전면파업으로 맞서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겠는가?

오라가락하는 지부 집행부

현대차 지부는 최근 갈지자로 걷고 있다. 부결 직후 현장분위기를 고려해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9월 18, 19일에는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정취근무’라며 파업을 회피했고, 아무 내용이 없는 자본의 교섭 제안을 덩싹 받았다. 자본이 ‘성실교섭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자, 정대위 회의를 19일에서 22일로 연기시켰다.

게다가 지부 집행부는 ‘아합안을 전면폐기하라’는 현장의 빔발치는 요구에 아직까지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부 집행부 또한 자본과 보조를 맞추면서 조합원들이 지치기만을 기다렸다가 아합안을 문구만 살짝 바꾸고, 돈을 약간 얹어 다시 들이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전면파업이 해결책

현장조합원들은 답이 뉘지 잘 안다. 현대 자본은 노동자들을 번번히 ‘확실

하게’ 무시하는데, 지부가 너무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한다. 이래서는 자본을 절대 물려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장 조합원의 정서는 정말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한판 붙어보자는 것이다”, “윤해보 집행부는 즉각 총파업 선언하라”(공투위 9월 18일자 대자보)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렇다. 탐욕스런 자본을 물려서게 만들고, 3무의 주간연속2교대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 요구 관철시까지 전면총파업을 벌이는 것이다. 지루하게 교섭하면서 시간을 끌고, 부분파업을 했다가 말았다 하는 것은 자본한테 노동자들을 우롱할 기회만 주고, 조합원들을 지치게 해서 투쟁동력을 갉아먹는 길이다.

총사퇴, 비대위 건설

그런데 두 번씩이나 아합했고, 여전히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집행부가 전면파업을 벌여 온전한 주간연속2교대를 쟁취할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아합집행부는 총사퇴시키고, 비상대책위를 건설해서 투쟁을 밀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현장조합원들은 지부 집행부나 현대 자본, 부자연론이 ‘노노갈등’이라며 비방해온 현장활동가들의 교섭 지지 투쟁과 부결 투쟁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손을 번쩍 들어주었다. 현장조합원들은 이미 현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불신을 드러냈고, 새로운 지도력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었다.

관건은 3무의 주간연속2교대를 전면 쟁취할 새로운 지도력을 얼마나 빠르고 확고하게 세워내는가에 달려 있다.

주간연속2교대 공동투쟁으로!

부결된 기아차 잠정합의안에는 “(원청)노사는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최대한 동일한 시점과 조건으로 당사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문구뿐이었다. 온전한 주간연속2교대제를 자동차산업 전체적으로 공동 실시한다는 내용 같은 건 흔적조차 없고 ‘최대한 권고’ 같은 상투적 문구만 있다. 현대차에는 그런 문구조차 없다.

이런 지경이다 보니 자본가언론들은 지금 현대·기아차의 주간연속2교대 투쟁에 대해 ‘훨씬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대공장 노동귀족의 집단이기주의’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쏘아붙이고 있다.

그런 악선동을 박살내려면, 지금부터라도 온전한 주간연속2교대 공동투쟁의 기초를 분명히 하고,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동투쟁을 실제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 집행부에게 공동투쟁을 하라고 말로 요구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강도 강화-임금삭감 없는, 연장노동 없는 주간연속 2교대, 신규공장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신규 일자리 창출, 부품사와 함께하는 주간연속 2교대 투쟁을 주장하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장활동가들이 나서야 한다. 현대차-기아차 활동가들이 모여 공동투쟁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 울산지역 활동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규탄집회

9월 27일(토) 3시

(장소는 추후 공지)

사노련 공대위,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사노련 등에 대한 탄압은 노동해방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동자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위기에 처한 자본가들을 살리고자 노동자민중을 희생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폭력이고 공포정치입니다.
- 사노련 공대위는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많은 동지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와 공안탄압 저지를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정치사상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공안탄압 분쇄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사노련 공대위

홈페이지 : sagong.net(제작중), 이메일 : silchon@jinbo.net